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한기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686
----------	------

발의연월일 : 2020. 9. 9.

발 의 자 : 한기호 · 김예지 · 홍준표
전주혜 · 강대식 · 최춘식
조수진 · 김석기 · 이철규
이양수 · 김용판 의원
(11인)

제안이유

6·25 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 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6·25전쟁에 참전한 비정규군 공로자의 경우, 국가수호의 일념으로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가해 나라를 위해 희생했지만 제도적 여건의 미비로 보훈 사각지대에 있음. 특히 현재 생존자들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할 때 더 늦기 전에 명예회복과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임무수행이나 참전시기 등이 유사한 백골병단유격대나 특수임무수행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을 마련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 할지라도 국가를 위

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하여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보상대상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비정규군 신분으로 직접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으로 함(안 제2조).

나. 공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다. 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며,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상금 등의 지급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공로자 및 유족 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자. 공로자 및 그 유족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았거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또는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6·25전쟁 중 비정규군 신분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공로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정규군”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외국군·유엔군 소속 등을 포함한다)되어 활동한 개인 또는 집단을 말한다.
2. “비정규전”이란 비정규군의 신분으로 적(적대적인 활동을 하는 집단을 포함한다)의 점령·지배·활동지역 안에서 적에 대항하기 위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을 수행한 작전을 말한다.
3. “공로자”란 비정규군의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로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유족”이란 공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및 제2장(외환의 죄)에 따른 죄
2.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제2장(이적의 죄) 및 제81조(암호부정사용)에 따른 죄
3. 「국방경비법」(1948. 7. 5. 호수 미상의 군정법률로 제정되어 1962. 1. 20. 법률 제1004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29조(암호의 부정사용)·제32조(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 및 제33조(간첩)에 따른 죄
4. 「반공법」(1961. 7. 3. 법률 제643호로 제정되어 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폐지된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른 죄

제4조(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2. 공로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공로자 또는 그 유족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4. 그 밖에 보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상금등) ① 공로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공로자에게는 비정규전을 수행한 기간, 형태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외에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공로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유족의 권리) 유족은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할 당시의 「민법」에 의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7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의 지연 등으로 이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1. 이미 위원회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 없이 동일한 내용의 지급신청을 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를 공로자로 주장하여 지급신청을 한 경우
3. 지급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제9조(결정서의 송달)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재심의)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제9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

심의를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심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지급결정 기한은 3개월로 한다.

제11조(보상금등의 지급 등) ① 보상금등을 지급하기로 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상금등에 대한 권리보호 등) ①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에 관하여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5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2.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한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실조사 등) ①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공로자·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검증 또는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누구든지 보상금등의 지급과 관련된 비정규전의 수행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소멸시효)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제18조(관련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정부는 공로자 또는 그 유족등으로 구성된 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

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중복 보상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로자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로자 및 그 유족이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3.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유사한 취지로 이미 금전적·비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외국군·유엔군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 또는 국가기관 등에 의한 보상수준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보상금등을 적절히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벌칙) 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른 비정규전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제7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